‘아이돌보미’ 집단소송 움직임

정부에 처우개선 · 근로자 인정 요구

시급 7800원…주휴 · 연차수당 없어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중인 ‘아이돌보미’ 사업이 갈등을 빚고 있다. 돌보미들이 정부에 처우개선과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서다.

아이돌봄지원서비스는 2008년 이명박 정부때 시행됐다. 이 제도는 만 12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맞벌이가정 등의 양육부담과 돌봄공백 해소, 사회적돌봄 강화를 위해 시작한 정책서비스다.

전국 222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간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현재 약 2만1000여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중인데 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 고용돼 영아종일제·시간제 두가지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3일 아이돌보미 및 방문지도사 현안해결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와 공공연대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돌보미의 시급은 7800원이다.

지난해 6500원에서 인상된 수준이지만 주휴와 연차수당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은 반영되지 않았다. 주말에 일해도 별도수당은 없고 교통비도 사라졌다. 열악한 처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돌보미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지만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주휴·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돌보미들은 정부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강력대응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에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라는게 골자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아이돌보미 노동자 1330명은 지난 2월9일 정부와 광역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을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3년(2015년~2017년)간 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제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정부에 요구했다. 소송 규모는 1010억원대로 알려졌다.

돌보미 384명은 지난 9일 체불임금 2차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들도 1차 소송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서울행정법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결이 있었지만 올해 예산에 재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3차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및 방문교육지도사 현안해결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도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여가부가 만든 지침안에서 그동안 업무를 수행해 왔다. 지침 기준인 매년 그리고 3년마다 있는 평가와 지도점검속에서 관리돼 왔다”며 “여가부가 기획한 아이돌봄사업과 방문교육사업의 정책운영실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여가부는 소송 및 단체협약과 관련해 공식문서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현장노동자와 함께 만들고 본사업의 발전적인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인력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수당을 20% 인상한데 이어 아이돌보미 대기 수요 해소와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대기수요 완화를 위해 수요가 몰리는 ‘집중시간대’를 설정, 아이돌보미 투입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이나 공동육아나눔터 등 기관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일대다(1:多)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와 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이라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일부 인상됐으며 향후에도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모내기 체험해요 23일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어린이들이 권농일의 의미를 되세기고 풍년을 기원하며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 8730억원…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국 243개 자치단체 합동 단속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4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으로 진행된다.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필요시 새벽·야간영치도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량 밀집지역에서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4000여명과 경찰관 300여명이 참여한다.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도 동원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다만 국민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지난 5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6278억원, 과태료 체납액 2452억원이다.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62%(약 4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3건 이상 체납차량의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약 28%(69만대)로 분석됐다.

대포차량 등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의 경우 압류·소유자(점유자) 인도명령이 내려진다. 이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과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노후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와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관광객 홍수에 뉴질랜드도 관광 규제 동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네치아,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일본 교토 등 세계 곳곳의 유명 관광지 주민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관광객들 때문에 “못살겠다”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도 관광 규제 움직임에 합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때묻지 않은 자연으로 유명해 영화 ‘반지의 제왕’ 등의 무대가 됐던 뉴질랜드가 지나치게 많이 몰려오는 관광객들 때문에 환경과 주민들의 거주권이 침해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새로운 관광세 도입부터 캠핑용 밴자동차를 규제하는 등 다양한 조치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뉴질랜드 남섬 오타고 지방의 와카티푸 호수 기슭에 자리잡은 퀸스타운 시 정부는 캠핑족들을 막는 방법으로 밤에는 와이파이를 차단하는가 하면, 공유숙소 에어B&B를 규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WSJ은 전했다.

오클랜드 인근 와이헤케 섬에서는 지난해 주민들이 관광버스 진입을 막는 시위가 벌어지기까지 했다.

WSJ는 관광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매년 작은 마을이나 도시에 수백만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세계 곳곳에서 저항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르셀로나 경우 지난해부터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부쩍 증가하면서 무허가 에어B&B 임대 단속을 시작했고 단속인력도 2배로 늘렸다. 베네치아 시정부도 시내에 추가 여행자 숙박시설 금지와 주요 관광지 내 관광객 과밀화 방지를 위한 피플카운터(People Counter) 사용을 도입했다. 필리핀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파괴된 보라카이섬 자연을 회복시키기위해 아예 폐쇄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온두라스 추락 美 비행기 탑승자 전원 구조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출발해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의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소형 민간 제트기 한 대가 22일(현지시간) 활주로 끝부분에서 추락해 두 동강이 났지만 승무원과 탑승객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인터넷에 제보된 동영상에 따르면 주택가에 이어진 이 비행기의 사고현장에서는 주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일부는 부서진 하얀 색 걸프스트림 기종의 제트기 동체에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일부는 손에 쥔 수동식 소화기로 기체의 불을 껐다. 이어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 비행기 잔해에 소화용 거품을 퍼부었다. 땅 바닥에는 비행기 부품으로 보이는 잔해들이 길을 따라 흩어져 있었다.

항공관련 플라이트 어웨어(FlightAware) 웹사이트는 이 비행기가 22일 아침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출발했다고 밝혔고 온두라스 항공당국도 이를 확인했다.

온두라스 비상대책본부는 트위터를 통해 사고 직후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승무원과 탑승객들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고 모두가 생존했다고만 말했다.

호주 대주교, 사제 성추행 은폐로 유죄 판결

필립 윌슨 호주 대주교가 1970년대에 한 사제의 아동성추행을 은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 세계 가톨릭 사제들 중 성추행 관련 범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최고위 성직자이다.

호주 현지 ABC 방송은 22일 재판부가 윌슨 대주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애들레이드 교구의 윌슨 대주교는 40여년 뉴사우스웨일스 지역 교구에서 짐 플레처라는 이름의 신부가 어린 소년 신도들을 성적으로 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플레처 신부는 2004년 9명의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됐다가 2006년 교도소 내에서 사망했다.

윌슨 대주교는 재판에서 지난 1976년 피해자들이 자신을 찾아와 플레처 신부의 범행에 관해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자신은 플레처 신부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한 증인은 재판에서 자신이 11살때 윌슨 대주교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고해성사로 알렸고,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고 혼이 났으며, 기도를 10번 하라는 벌까지 받았다고 증언했다.

로버트 스톤 판사는 윌슨 주교가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형량은 오는 6월쯤 내려질 예정이며, 최대 2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